



I. 자치단체 현황

1. 개요

가. 일반현황

- 위 치 : 경상북도의 최남단으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밀양시에 둘러 쌓인 청정지역으로
세계인류 전원도시 지역임.

인구(명)	면적(km ²)	산업구조(%)			비고
		농·어업(1차)	공업(2차)	서비스업(3차)	
44,179	696.89	49.3	10.9	39.8	

나. 2011년도 재정현황

(단위 : 백만원)

재정규모(백만원)			재정자립도 (%)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64,398	247,000	17,398	10.91

세 입			세 출			비고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계	264,398	100.00	계	264,398	100.00	
지방세수입	13,360	5.05	• 일반공공행정	11,604	4.39	
세 외 수 입	23,718	8.97	• 공공질서및안전	18,610	7.04	
지방교부세	121,590	45.99	• 문화및관광	21,761	8.23	
재정보전금	3,200	1.21	• 환경보호	35,116	13.28	
보 조 금	102,530	38.78	• 사회복지	36,213	13.7	
			• 보건	4,661	1.76	
			• 농림해양수산	42,345	16.02	
			• 산업중소기업	976	0.37	
			• 수송및교통	10,267	3.88	
			• 국토및지역개발	35,698	13.5	
			• 예비비	3,905	1.48	
			• 기타	43,242	16.35	

다. 지역의 대표적 특성

청도군은 삼국통일의 정신적 원동력이 된 화랑정신의 발상지이며 오늘날 조국근대화의 초석이 된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로서 우리 민족의 양대 정신문화가 발아된 고장으로 경부선 철도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국도 20호, 25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또한 푸른 산 맑은 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운문사, 석빙고, 향교, 청도읍성, 고택 등 문화유적지를 비롯한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청도소싸움축제, 청도반시축제, 정월대보름 행사 등 다양한 관광문화상품이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주요 특산물로는 청도반시(감), 복숭아, 미나리, 감말랭이, 반건시, 아이스 홍시, 감와인, 감물염색, 팽이버섯 등 청도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고장이다.

II. 재정운용상 문제점

청도군은 201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상태와 운영실태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평가한 결과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는 열악한 재정상태이지만 재정의 효율화, 건전성, 계획성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하고 낭비성이 있는 재정지출을 자제하는 반면, 자치단체장(청도군수 이중근)을 중심으로 2020 비전전략인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 · 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토대로 지방채무가 타시군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1년 당초기준 재정자립도 10.91%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당면한 공공 수요를 적절히 공급 할 수 있는 재정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 높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정책과 맞물리는 예산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군정을 펼쳐왔다.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 증가, SOC 사업 등 국비보조사업 자체부담 가중, 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운용상의 몇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부담 가중

오늘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은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정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군은 자체수입 비중이 낮은 농촌지역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노인복지비,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련 비용의 재정수요가 매년 늘어나 사실상 자치단체로 하여금 복지비 지출을 강요당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재정력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분권교부세가 적게 교부되어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한 효율적인 이전과 분권 책임 원칙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와 성과에 대한 자기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이 충분하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실제 분권교부세(내국세 0.94%)는 지난 6년간 증감없이 비슷한 수준이나 사회복지이양사업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군의 분권교부세는 지난 5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으나 이양사업을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은 5년간 평균 13.72%로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군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1>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이제 노인 및 사회복지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어 실제로 노인에 대한 복지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걸맞는 분권교부세가 교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1〉 분권교부세 및 사회복지이양사업 현황(최종예산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분권교부세	15	14	15	15	14	
이양사업	29	31	42	49	52	
사회복지비 (증감율)	235 (0.43)	255 (8.51)	334 (30.98)	412 (23.35)	434 (5.34)	

2. 주요 SOC 사업 등 국비보조사업 자체부담 가중

청도군을 비롯한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국비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자체 재원을 충당하기엔 벅찬 실정에 있다. 예를 들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 경쟁력사업 등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매년 부담액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군으로 보면 재정여건상 투자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면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 과중으로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2010년도 당초예산기준으로 국비 578억원 지

방비 316억원, 2011년 국비 744억원 지방비 373억원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큰 상승폭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반면에 지방비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비보조사업이 국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그 목적을 두지만 보조비율의 형평성 문제를 들 수 있다. 국비:지방비 비율, 지방비중 도비:시군비 부담률에서 시군비를 자체 재정력에 비해 과중하게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역사성과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추진할 자체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다.

3. 경기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능력을 판단하는 잣대이다.

우리 군은 타자치단체에 비해 인구수 및 지리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리 넉넉한 재정살림을 갖추고 있지 않다. 자체수입비율이 낮고 지방교부세의 의존율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취약한 재정력을 가진 군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 에서 보듯이 세출예산 규모(일반회계)대비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으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재정의 절반이상을 중앙정부가 교부금 등의 방식으로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표2〉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 연도별 현황 (최종 예산 · 결산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일반회계	1,846	1,890	2,370	2,300	2,452	
지방세	105	113	131	139	154	
경상세외수입	42	42	45	45	34	

III. 재정운용 건전성 · 효율성 제고대책

1. 현저히 낮은 지방채무로 재정안정성 도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대표하는 2010년말 현재 채무잔액이 74억원(국비 63억원)으로 대부분이 국가장려사업의 채무부담이며, 또한 장래세대의 채무부담도 타시군보다 현저히 낮아 중장기 측면에서 재정안정성이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 연도별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채무잔액 (국비)	208 (국비 149)	174 (국비 128)	122 (국비 106)	98 (국비 84)	74 (국비 63)	

※2010년 재정분석결과 자료임.

총 74억원중 상·하수도사업의 채무 63억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는 자체재원으로 상환하지 않는 채무이다. 특히 우리 군은 2009년 보통교부세 삭감(내국세 정부추경예산 감액편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겪었음.), 2009·2010년도 예산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무를 발행하지 않는 등 타시군에 비해 매우 합리적인 채무관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지방세 · 세외수입 징수 방안 강구

매년 뚜렷한 재산세 등의 지방세나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의 세외수입의 세원발굴이 없어 군 자체 여건상 큰 폭의 세입증가는 어려운 실정으로 있으나,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로 세금포탈, 누락분 등 추징, 체납세 특별 전담반(T/F)구성, 수납개선 등으로 인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 감소를 위한 무한한 노력으로 세입재원을 확충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사업양도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체납법인의 통장압류, 자동차 번호판 압류, 재

산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와 병행하여 실시함에 따라 (주)000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고액체납세를 92억원을 징수하여 큰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납세의무를 인식시켜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매년 정기분 주민세,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하고 납세자가 알기 쉽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함으로써 지방세법 내용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세의 홍보를 통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꾀하였다.

아울러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각종축제 행사를 하면서 관광객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자립형 축제로 만들기 위하여 입장료 징수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청도소싸움축제의 경우 약 8.5억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다. 그 결과 지방세정 종합평가(경상북도)시 2009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3. 민간이전경비, 축제성경비 등 절감 노력

매년 개최되는 전국 최대축제인 청도소싸움축제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행사비용을 증액편성 없이 최소규모, 최소비용으로 절감하였다. 축제성 경비 등을 비롯한 경상경비 10%이상 절감(2008년 28억원, 2009년 23억원의 2010년 12억원)토록 하였으며, 또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의 효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카드 작성 등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통하여 최대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절차와 관리운용방법의 미흡으로 매년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하여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어 2007년부터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도입으로 행정의 신뢰성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세금의 잘못된 쓰임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예산편성전 사전설문조사를 통하여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히 추

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투자비 사업 즉 개발촉진지구사업 등 SOC사업, 중장기적인 계속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 세출관리의 효율화에 대한 적극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상반기 예산조기집행의 우수기관단체로 되어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데 행정정력을 강구하였다.

4. 기반시설 확충 등 투자지출 비중 확대 노력

5만 청도군민들과 더불어 2008년 6월 5일 민선 제7대 이중근 청도군수가 출범하면서 “함께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청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계인류 전원도시 건설 및 청도성공시대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2020 중장기 비전전략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대 목표 30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신규사업 발굴 등 총 214건의 비전전략사업을 제시하여 기반시설 확충 등 투자지출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 2011년 순수 국비 확보율이 전년대비 28.7%나 크게 늘어났다.

IV. 지방재정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우리 군을 비롯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재정 구조를 갖고 있으며,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의 실행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재와 같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위해 몇 가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1. 국세 이양,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지방세입 확대

먼저 지방세수가 늘어나지 못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사이의 세원 배분구조가 8:2로 중앙정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제도화되어 있는데 기인하는 면이 크다.

그리고 최근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 세입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어, 좀 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과 지방사이의 세원 배분구조, 조세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이 요구 되어진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탄력세율 적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전국 평균수준을 감안하는 지역안배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호가 반영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목표가 우선시 되어 사업대상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사회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최근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육성 지원하는 과정에 국비:지방비 비율을 50:50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2010년 청도군 총 14억원중 지방비 7억원) 아이러니한 현실적인 차이를 볼 수 있다.

또한 2010년 당초예산 세출예산 규모 2,334억원중 지방세 수입이 123억원(5.3%)으로 국고보조사업 자체부담 경비에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지역특성자체 사업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국고부담비율을 높이고 자치단체에서 자주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향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